

# GAAS :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

##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「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」 발표 (금융위원회)

### 추진배경

- 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수, 시가총액 등 양적인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으나,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가치, 성장성 등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
-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측면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옴
  - IPO시장(진입)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공모가와 상장일 이후 주가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, 완화된 상장폐지(퇴출) 요건과 절차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
- 「IPO 제도개선 방안」과 「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」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

### 주요 내용

#### (1) IPO 제도개선 방안

- 근본적으로 IPO시장이 “단기차익 목적 투자 → 기업가치 기반 투자”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
- **(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)** 기관투자자가 단기매도를 지양하고 기업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에 참여하도록 유도
  -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을 확대
    - ✓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%(\*)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
      - (\*) 단,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'25.7월~'25년말은 30%, '26년부터 40% 적용
    - ✓ 확약 물량이 40%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%를 취득(상한금액 30억원)하여 6개월간 보유하

도록 하고,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3개월 → 6개월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

-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
  - ✓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,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는 공모물량의 5~25% 별도배정 혜택이 제공되어 왔으나, 향후에는 최소 의무보유 확약(15일 이상)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
- 의무보유 확약 위반, 미청약·미납입 등에 대한 협회차원의 제재 강화

■ **(수요예측 참여자격·방법 합리화)** 수요예측의 비합리적 과열·쏟림현상을 야기하는 제도적 요인 개선

-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
- 재간접펀드, 외국기관투자자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 제한
- 초일 가점제도 개편

■ **(주관사 역할·책임 강화)** 주관사가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“합리적 공모가 산정, 중·장기 투자자 확보”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

-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
-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 구체화
-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를 강화

## (2)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

■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함

■ **(상장폐지 요건 강화)** 정량요건인 시가총액, 매출액 기준 강화 및 감사의견 미달요건 정비

- 대표적 정량요건인 시가총액(시장평가 관련), 매출액(기업실적 관련)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
- 시총·매출액 요건 단계별 강화방안

|        |           | 코스피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코스닥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|           | 시가총액  | 매출액(시총1,000억원 ↓<br>에만 적용) | 시가총액  | 매출액(시총600억원 ↓<br>에만 적용) |
| 현행     |           | 50억원  | 50억원                      | 40억원  | 30억원                    |
| 상<br>향 | ‘26.1.1.~ | 200억원 | 50억원                      | 150억원 | 30억원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‘27.1.1.~ | 300억원 | 100억원                     | 200억원 | 50억원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‘28.1.1.~ | 500억원 | 200억원                     | 300억원 | 75억원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‘29.1.1.~ | -     | 300억원                     | -     | 100억원                   |

- 감사의견 미달(감사의견 한정, 부적정, 의견거절) 요건 기준 강화
  - ✓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
  - ✓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·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
- 기존 코스닥에만 도입되어 있던 분할재상장(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)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코스피에도 도입

■ **(상장폐지 절차 효율화)**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기업에게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축소하여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기간 축소

- 심의단계 및 개선기간 축소방안

|      | 코스피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코스닥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| 형식(이의신청)                   | 실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형식(이의신청)         | 실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심의단계 | 1심<br>↓<br>동일              | 2심<br>↓<br>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| 1심<br>↓<br>동일    | 3심<br>↓<br><b>2심</b>         |
| 개선기간 | 최대 2년<br>↓<br><b>최대 1년</b> | 최대 4년(2+2)<br>↓<br><b>최대 2년(1+1)</b> | 최대 1년<br>↓<br>동일 | 최대 2년<br>↓<br><b>최대 1.5년</b> |

- 개선기간 추가부여 성격의 속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음
-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심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

■ **(투자자보호 보완)** 퇴출기업 주식의 계속적 거래 지원 및 투자자 알권리 강화

-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
  - ✓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-OTC를 활용하여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을 개선
  - ✓ K-OTC에 “(가칭)상장폐지기업부”를 신설하고 동 기업부에서 6개월간 거래를 지원
  - ✓ 6개월 거래 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평가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K-OTC로 연계 이전하여 거래유지
-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 확대
  - ✓ 투자자의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“개선계획”의 주요내용을 공시(단, 대외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(예:구체적 M&A 내용)은 제외)

## 향후계획

- **(IPO 제도개선 방안)** '25.1분기에 협회규정 개정, '25.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
  - 바로 시행 가능한 내용은 4.1일부터(\*),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7.1일부터(\*\*) 시행할 계획
  - (\*) [4월 시행] 확약위반자 제재강화,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
  - (\*\*) [7월 시행]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,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 확대,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, 주관사 내부배정기준 구체화,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
  -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,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'25.2분기까지 관련 「자본시장법」 개정안 발의를 추진
- **(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)** '25.1분기에 거래소세칙 개정, '25.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
  - 즉시 시행이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 축소, 형식·실질 병행심사는 '25.1분기중 거래소세칙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
  -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, 분할 재상장시 심사 강화, 상장폐지 심사기업의 개선계획 공시는 기업안내 등을 고려하여 7.1일부터 시행하고 시가총액, 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'26.1월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
  - 비상장거래 지원을 위한 K-OTC내 상장폐지기업부는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을 거쳐 재무요건 강화와 함께 '26.1월 신설될 예정

##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세요. (금융감독원)

### 개요

- **(개념)**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(\*)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(제8조)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마련·운영하여야 함
- (\*)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(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1천억원 이상)
- **(위반시 제재)**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위반시 회사, 대표이사, 감사 및 외부감사인(3천만원 이하)을 부과받을 수 있음

## 2023 회계연도 점검 결과

- 위반 건수(총 15건)는 감소 추세(\*)이나, 여전히 회사 재무·경영 상황의 어려움,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

(\*) 과거 5년 평균 30건('18년:28건→'19년:41건→'20년:56건→'21년:10건→'22년:14건)

- **(위반유형)**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5건, 운영실태·평가 미보고 6건, 검토의견 미표명 4건
- **(조치결과)** 회사(600~1,200만원), 대표이사·감사(300~600만원), 외부감사인(600~720만원)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

##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

### (1) 내부회계 미구축

-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함
-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야 함
- 다만 비상장 법인이더라도, 1)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, 2)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, 3)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
- **(위반사례)**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(1천억원 이상)인 A사는 '22년 말에는 **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**이었으나 '23년 말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서 제외되어 '23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**없다고 오인**

### (2) 회생절차 신청

-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음에 유의
- **(위반사례)** B사는 '23년에 기업 **회생절차 개시**를 신청하면서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미운영 ('24년에 **회생절차 개시**)

### (3) 내부회계 인력 확충

-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(상근이사 등)를 지정하여야 함
- 또한 내부회계관리 조직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제도의 설계, 실행,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
- **(위반사례)** C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축하였으나, 내부회계관리 실무진이 대부분 퇴사하였음에도 **인력을 보완하지 않아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**

#### (4) 대표자·감사의 보고

- 대표이사는 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(위원회)에게 운영실태를,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 관련 사항을 의사록 등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함.
- (위반사례) D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,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,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

####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

-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('23.5월)되었으나, 예외 사항에 유의
    - 비상장법인 중 금융회사,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공시대상기업집단(\*)에 속하는 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
  - 2024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·보고 기준의 적용이 개시
    - 「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」이 「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」에 규정화(제3조의2)되어 2024회계연도부터 적용됨
    - 다만, 2024회계연도에 한해 기존의 자율규정(\*)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나, 2025회계연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됨
- (\*)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
- (\*) 한국상장사협의회 「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」 등

#### 향후 계획

-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(\*) 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
-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모범규준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-업무자료-회계-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·다운로드 가능함

※ 금융감독원홈페이지 [\[Link\]](#),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홈페이지 [\[Link\]](#)

# 국내·외 투자자가 재무분석에 활용하는 XBRL 데이터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성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. (금융감독원)

##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의 올바른 XBRL 재무데이터 생성을 유도하고, 자체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‘XBRL 재무제표 본문·주석 작성 가이드’를 마련
- 우리나라는 감독당국이 XBRL 작성기를 개발한 특성상 제출인이 정확한 XBRL 재무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①회계기준, ②XBRL 주석 모범사례와 ③유의 사항 등을 반영 함

## XBRL 재무제표 본문·주석 가이드 주요 내용

- 선진화된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美 SEC(증권거래위원회)와 데이터 품질 관리 기관 등의 작성 지침을 기본으로 참고하고, 금감원 XBRL 재무제표 작성기 등 DART 시스템을 기반으로, 다양한 실무 작성 예시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
- (가이드 구성) 전체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,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의 구체적인 작성 원칙과 실무 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

| 구분  | 구성   | 주요 내용   |
|-----|--|---|
| 제1장 | I . 가이드의 제정 목적<br>II . 가이드의 구성<br>III.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이드 제정 목적과 가이드의 구성을 설명하며,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  |
| 제2장 | I . XBRL의 개요<br>II . 택사노미(Taxonomy)란 무엇인가?<br>III. 인스턴스(Instance)란 무엇인가?         | XBRL의 주요 개념과 XBRL 공시를 위한 분류체계인 택사노미(Taxonomy), XBRL 공시 정보(Fact)의 디지털 문서인 인스턴스(Instance) 등을 설명 |
| 제3장 | I . XBRL 도입 배경 및 경과<br>II . DART 택사노미(Taxonomy)<br>III. 금융감독원 XBRL 공시시스템         | 한국의 XBRL 제도의 발전과정 및 해외사례, DART 택사노미(Taxonomy)와 XBRL 작성기 등 XBRL 공시시스템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4장 | I . 재무제표 본문 작성 원칙<br>II . 재무제표 본문 작성시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BRL 재무제표 본문 작성 원칙과 유의사항 설명   |
| 제5장 | I . 재무제표 주석 작성에 관한 금감원 공시제도<br>II . 재무제표 주석 작성 원칙<br>III. 재무제표 주석 작성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 | XBRL 재무제표 주석 작성 원칙과 유의사항 설명   |

- 또한, 제출인이 쉽게 XBRL 주석 모범 공시 양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XBRL 작성기 사용 방법도 함께 기재
- (다운로드) ‘XBRL 재무제표 본문·주석 작성 가이드’는 DART 접수시스템(filer.fss.or.kr)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